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18('22-8) | 2022. 08. 01.

윤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 의의와 성과
김열수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보훈단체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인식
문근형

동맹관계의 경제 안보적 접근과 이해
최규상

윤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 의의와 성과

김 열 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말 3박 5일 동안 ‘2022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윤대통령은 한국의 새로운 수출 시장이거나 공급망 구축, 그리고 미래 기술 협력이 필요한 프랑스, 폴란드, 호주,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정상들과 맞춤형 양자회담을 가졌다. 북핵 문제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당부했다. 윤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원전,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다양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북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졌다. 무려 4년 8개월 만이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핵 문제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북한 핵개발 의지가 강할수록 한미일 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연합 훈련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향후에는 더 자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개최될 것이다. 금번 나토 정상회의 동안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았지만, 공식 회담과 비공식 접촉은 있었다.

윤대통령은 한일 간의 현안 문제와 미래 양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일 간의 관계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상 처음으로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회담도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4개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논의했다. 대단히 포괄적인 논의 이긴 했지만, AP4 회담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향후에 더 자주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의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윤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핵 문제와 가치 연대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되는데 한국과 나토의 협력관계가 이런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은 올 하반기에 브뤼셀에 주 나토 대표부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나토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윤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AP4회담,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가치 규범의 연대를 확인하고, 신항안보 협력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최악의 관계에 있었던 한일 관계도 해빙의 계기를 마련했다. 나토의 AP4 초청은 나토와 서방세계가 한국 등 4개국을 아·태지역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한국이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추적 행위자(pivotal actor)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는 이런 정상회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나토가 올해 채택한 새로운 전략개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토는 전략개념을 통해 러시아를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으로 규정했고 중국을 나토의 안보, 이익, 가치에 대한 체계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면서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합종연횡과 세불리기가 신냉전의 신호탄처럼 보인다. 이런 시대에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 윤대통령은 어떤 국가든지 간에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지켜야 할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를 규탄하고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런 원칙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힘을 발휘하려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連帶)해야 한다. 200년 이상 중립을 유지했던 스웨덴과 70년 이상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유도 연대하면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연대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보훈단체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인식

문 근 형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관)

보훈단체와 보훈의 가치

보훈단체의 역할과 위상정립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국가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함께 국가와 민족이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다. 보훈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분열 보다 사회 통합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훈단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정적인 시각에는 보훈단체가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가는 과거 기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색깔이 짙은 보수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보훈의 중요성과 조국 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시대가 변화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등 14개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 보훈이 잘 실천되려면 보훈단체의 활동은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생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국가 안보와 애국심 배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보훈단체들의 활동과 인지정도 등을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한 보훈단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1년 5월 중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163명이 응답한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설문 후에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점 척도 방법과 다중응답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통하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분포는 남학생 106명(65%), 여학생 57명(35%)로 나타나 남학생 응답인원이 여학생의 약 2배를 나타냈다. 학년별 분포는 163명중 대학교 1학년은 53명(32.5%), 2학년은 43명(26.4%), 3학년은 30명(18.4%), 4학년은 31명(19%), 그리고 대학원생 6명(3.7%)이 응답하여 학년별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공법보훈단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로, 응답자들이 가장 인지하고 있는 단체는 '6.25 참전 유공자회'이고 다음으로는 광복회, 월남참전자회에 이어서 재향군인회가 4번째의 인지도를 보였다. 재향군인회는 회원이 가장 많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14개의 공법단체 중에 4번째의 인지도를 보여주어 기대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했으며, 가장 낮은 인지도는 고엽제 전우회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안보단체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문항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인지하고 있다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대학생은 4.3%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이 74.4%로 안보단체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단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반면 안보의식 수준을 확인한 문항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44.2%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답변은 7.3%로 안보단체는 잘 모르지만 안보의식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안보단체를 잘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보단체의 활동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는 답변이 38.6%로 인지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뢰하지 않는 층은 11.4%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한 문항에서도 중요하다고 답변한 인원이 57.7%,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인원이 6.1%로 나타나 안보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확인하였다. 안보단체 신뢰도 문항과 함께 안보단체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과 안보 단체가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은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안보단체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43.5%)과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26.3%)을 보면 남북관계에는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문항으로는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안보(국방), 정치, 경제, 자연재해, 주변국과의 관계'중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답변결과는 대다수의 학생들이(46%) 안보(국방) 불안이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주변국과의 관계(18.4%), 경제 불안(16.6%), 정치불안(15.3%), 자연재해(3.7%) 순으로 답하였다. 안보단체 활동에 동참할 의향을 물어본 문항에서는 52.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보훈단체의 역할 제고

보훈단체는 관변단체, 어용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 과거의 진한 보수 색채를 벗어나 시대적 추세를 맞게 보훈단체의 성격도 과거 폐쇄적 이권집단에서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권익단체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관한 사고는 건전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앞장설 각오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보훈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보훈단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많은 학생들이 이해도가 미흡하여 보훈단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보훈단체를 관리 하는 국가보훈처에서 통합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보훈과 선양사업 그리고 안보교육에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도록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보훈단체가 올바르게 인식되어 질 수 있도록 각 보훈단체에서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선진국에 걸맞는 보훈단체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동맹관계의 경제 안보적 접근과 이해

최 규 상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동맹의 딜레마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인 국력은 ‘한 나라가 가진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따위의 모든 방면에서의 힘’을 의미한다. 국력은 한 국가가 그 국가의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하는 능력을 말하며, 무력 외교적 관점에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국력의 요소로는 인구와 영토, 천연자원을 들 수 있으나 국력이 지극히 국제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군사력과 경제력, 정신력 등을 대표적인 국력의 요소로 중시하게 된다. 또한, 한 국가의 국력은 단지 해당 국가가 가진 자국의 국력뿐만 아니라 그 국가와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맹국의 국력을 포함한 ‘동맹국력’에 의해 평가받기도 한다. 동맹은 필연적으로 이에 반하는 ‘반대동맹’을 결성시킨다. 이는 다시 그 상대 동맹의 세력 확장을 자극하게 되고 이러한 연쇄 반응적 조작으로 인해 동맹체의 비대 현상이 심화하면 2개의 커다란 동맹으로 응집된다. 또한, 양대 동맹의 세력균형이 특정 이유로 불균형 상태에 이르면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동맹 세력 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동맹국은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군사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 체제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동맹에 대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반대 동맹세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돌연 러시아라는 변수가 생겼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개시 명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이는 미국과 NATO 동맹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성향의 분리주의 반군 세력 간의 국지적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개입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NATO의 동진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NATO 동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NATO군이 ‘1997년 경계선’ 밖으로 철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NATO는 새로운 회원국에 대해 ‘열린 문’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러시아와 NATO 간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안보적 함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맹의 선택과 역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 국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직접적인 참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푸틴이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어 핵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참전을 꺼리는 것이다.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NATO는 유럽지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맹기구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하고 ‘신전략 개념 2022’를 천명함으로써 NATO의 공간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동맹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의 영향력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NATO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 한국은 NATO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과 역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곤 했다. 미국은 한국의 혈맹국이며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상대국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라는 정책성 모호성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균형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이 더는 한국의 국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배타적 경제 관계를 형성하고 국제정치 질서가 두 강대국 중심의 새로운 냉전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 정부가 이전까지 추진했던 미중 균형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느 일방의 편도 들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였고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손해를 보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제로섬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

자율과 동맹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인 ‘안보와 자율의 교환(Security-autonomy trade offs) 모델’은 ‘자율과 안보는 서로 교환적이며 동맹은 안보와 자율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중국 중심의 동맹 세력 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하게 될 신냉전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접근법은

세력의 균형과 편승 정책 외에도 중립과 유화, 관여 등 다양한 정책적 해법이 있을 것이며, 특히, 경제 안보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안보는 ‘안보를 위한 경제(Economy for Security)’의 개념이 ‘경제를 위한 안보(Security for Economy)’ 개념으로 진화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상수, 중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는 변수’로 활용하는 정부의 정책적 해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